

최태원 “HBM 생산량 확대… 영업익 1000억弗 넘을 수도”

(SK회장)

최종현학술원 TPD 행사 참여
AI대 전환기 선도적 대응 강조
“한·미·일 협력 통해 해법 찾아야”

“HBM은 가장 진보된 기술이며 우리 회사에 진짜 큰 돈을 벌어드 주는 제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영업익 1000억달러 시대를 전망했다.

HBM은 D램 칩을 쌓아 만든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으로, AI 산업의 핵심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AI 시대 필수 부품으로 꼽힌다. 최 회장이 언급한 괴물칩(monster chip)은 칩 16개를 쌓아 만든 SK하이닉스의 최신 HBM 4세대를 지칭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파시픽 다이얼로그(TPD) 환영사에서 해당 칩을 언급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괴물칩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 및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드 주는 제품”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몬스터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익이

에 대해 “시장의 새로운 전망치는 1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1000억달러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과 마진율 변동성이 워낙 큰 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PD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3국 협력 ▲AI 리더십 경쟁과 산업 변화 ▲금융 질서 재편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긴장 시대의 안보 동맹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한국과 미국·일본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AI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자본과 자원이 있어야 AI 설루션을 확보하고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AI 인프라가 국가와 기업의 금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서 계속

추가 관세 부과 조사 필요 구윤철 “국익 중심 대응”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70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성민 기자 kys@

>> 1면 ‘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서 계속

특수보다 선수미래 투자

이어 최 선수는 롯데월드, CJ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스폰서 기업들을 차례로 태그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가온의 ‘감사 인사’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CJ그룹의 후원도 조망받고 있다. 최 선수는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기자회견에서 “CJ비비고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셔서 캐리어 한 짐 가득 싸서 다닌다”며 “외국에서 비비고 한식을 많이 먹어 컨디션 조절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CJ는 2022년 국제스키연맹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23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특히 2024년 최 선수가 부상에 따른 수술과 재활로 강원 동계유스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는 시련을 겪었음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이어갔다.

올림픽 마케팅의 진정한 승자는 단기 특수를 노린 홍보보다 선수 미래를 내다본 오너들의 욕심이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각별한 종목 애정과, ‘기업이 젊은이의 꿈이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후원 철학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美, CTL강관 관세 확정… 현대제철 하락·동국제강 소폭상승

동국제강 2.21%·현대제철 1.31%
낮은 대미 수출… 실적 영향 제한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특정 길이 절단 탄소강관(CTL 강관)에 대한 지난 2023년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관세 부담이 조정됐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이번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관보(2월 20일자)에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 CTL 강관 상계관세율이 동국제강 2.21%, 현대제철 1.31%로 기재됐다. 연방 관보 게재 후 35일이 지나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평가(assessment) 지침을 발행하고, 기존 예치 관세와 최종 관세율 간 차이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결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아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집행정지 신청 기한(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종료 시점까지 정산은 보류될 수 있다. 또한 최종 결과 공표 이후 통관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관세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현금 예치금이 적용되며, 예치율은 별도 변경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전년도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하면 업체별 관세 부담의 방향이 엇갈렸다. 지

난 2022년 최종 관정에서 동국제강은 2.01%, 현대제철은 2.21%였지만, 2023년 관정에서는 동국제강이 2.21%로 소폭 상승한 반면 현대제철은 1.31%로 하락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관세율 조정이 양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 능력은 약 2400만톤이며 실제 생산량은 시황에 따라 약 2000만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연간 약 40만톤으로 전체 생산의 약 2% 수준에 그친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 2023년 기업 분할 이전 통합 기준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은 1%대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전체 수출 구조를 보면 판재류의 대미 수출 비중이 5.8%로, 봉형강류(8.5%)와 강관(59.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책 전문 매체 워런 커뮤니케이션스 뉴스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 CIT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2년 행정심사에서 미 상무부가 한국의 심야 전기요금 할인을 특정 산업 보조금으로 본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상무부가 서로 연관성이 낮은 산업을 묶어 철강 산업이 보조금을 과다수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전기요금 보조금 인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된 다른 연례재심 결과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 대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율 하락이 긍정적 요인이긴 하지만 영향 규모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해은 기자 dhalehale@

금융당국,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규제강화 검토

주택유형·소재지 세분화 ‘핀셋 대책’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신흥·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주택 유형 및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

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대출에 대해 사실상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LTV 0%가 적용된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완 장치 마련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